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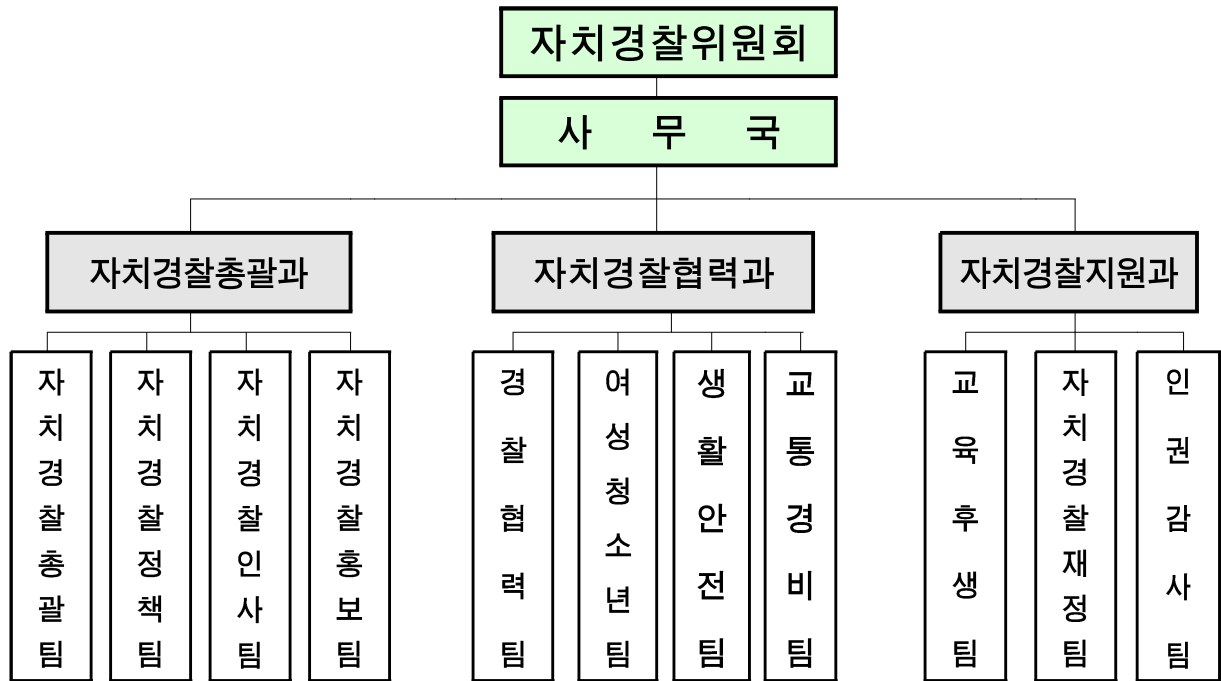
주요 업무보고

2023. 11.

자치경찰위원회

I. 일반 현황

조직 1국, 3과, 11팀



인력 42/58(정원/현원)

(’23. 9. 30. 현재)

구분	합계	일반직	정무직	임기제	경찰관	관리운영직
계	42 / 58	37 / 38	2 / 2	0 / 0	3 / 18	0 / 0
자치경찰총괄과	21 / 25	17 / 18	2 / 2	0 / 0	2 / 5	0 / 0
자치경찰협력과	9 / 20	8 / 10	0 / 0	0 / 0	1 / 10	0 / 0
자치경찰지원과	12 / 13	12 / 10	0 / 0	0 / 0	0 / 3	0 / 0

※ 정무직 정원 : 자치경찰위원장(정무직 1급), 사무국장(정무직 2급)

※ 경찰관 정원파견 : 3명(총경1, 경정1, 경위1)

※ 경찰관 및 시교육청 현원파견(정원외) : 16명(경정3, 경감5, 경위5, 경사1, 경장1, 교육1)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자치경찰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행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관리 ○ 자치경찰 시행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경찰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과의 업무협력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국가·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구성 및 운영 ○ 자치경찰사무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생활안전, 다중운집행사 안전지원 등 관리
자치경찰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 시책의 수립 시행 ○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후생복지 지원방안 검토 ○ 특수지역경찰대(지하철, 한강, 관광) 운영예산 지원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자치경찰사무 경찰관 감찰요구

예 산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위원회 사무국	20,411	24,967*	4,556

* 추경예산 24,119백만원 / 이월 848백만원

○ 부서별 예산 : 총 249억 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합 계	20,411	24,967	4,556
자치경찰총괄과	1,956	3,028	1,072
자치경찰협력과	1,064	16,077	15,013
자치경찰지원과	17,391	5,861	Δ11,53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현황

○ 위원장 : 김학배

– 상임위원 : 김성섭(사무국장 겸직)

– 비상임위원 : 권성연, 김성태, 이창한, 장전배, 좌세준

○ 임기 : 3년(연임 불가), '21.6.28~'24.6.27

○ 위원 프로필

사진	성명	성별	주요경력
	김학배 <위원장>	남	- (前)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 (前)대전·울산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수사국장
	김성섭 <사무국장>	남	- (前)서울중부·경기과주·경남하동 경찰서장 - (前)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 (前)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권성연	여	- (現)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 (現)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 (前)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김성태	남	- (現)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現)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前)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이창한	남	- (現)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現)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연구원 원장 - (現)한국경찰학회 회장
	장전배	남	- (前)총포화약기술협회 이사장 - (前)전북·광주·제주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경비국장
	좌세준	남	- (現)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 (前)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장 - (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II. 정책 목표

추진방향

1 서울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는 「안심 치안 서울」 조성

➢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곳에 치안력 집중, 체감 안전도 향상

2 약자와 함께, 시민과 함께, 동행 치안 활성화

➢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및 시민참여 활성화

3 더 안전한 서울로 가기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실현

➢ 실제 지역치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비전체계

비전

자치경찰 2년, 가장 안전한 치안도시 서울

핵심
목표

<안심치안서울>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서울 조성

<동행치안활성화>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동행 치안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주요
추진
과제

1.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매력도시 기반 마련
2. 재난 및 다중운집 행사 관리체계 구축
3. 범죄예방활동 및 인프라 강화
4. 운전자·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대책

5. 소외된 약자 없이 누구나 안전한 서울
6.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드는 더욱 안전한 서울

7. 서울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마련
8. 대정부·국회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실현

Ⅲ.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서울 조성

- ① 시민이 안심하는 범죄예방환경 조성 사업 추진
- ② 서울시-서울경찰청 협업을 통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 ③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 ④ 기관 협업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 ⑤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질서 준수 문화 적극 조성

2.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치안 추진

- ① 안전으로부터 소외된 약자가 없는 예방·지원활동 전개
- ②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③ 한강경찰대 시설·장비 개선으로 시민안전 강화
- ④ 반려견·대학생 순찰대 운영으로 주민친화 방법활동 추진
- ⑤ 치안 유관단체 운영 및 협업체계 활성화

3. 자치경찰 제도개선 추진 및 운영 내실화

- 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②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형 치안 지휘체계 확립
- ③ 자치경찰 교육·후생복지 지원으로 소속감 및 사기제고
- ④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및 소통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 ⑤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인사·감사 적극시행

1.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서울 조성

- ① 시민이 안심하는 범죄예방환경 조성 사업 추진
- ② 서울시-서울경찰청 협업을 통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 ③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 ④ 기관 협업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 ⑤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질서 준수 문화 적극 조성

1 시민이 안심하는 범죄예방환경 조성 사업 추진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시설물 설치, CPTED 적용으로 주민 체감안전도 제고

□ 추진개요

- 배경 : 강력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치안 강화 필요성 대두
- 대상 : CCTV 사각지대 등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
- 내용
 - 범죄예방인프라 사업시행으로 으스스한 주거지 골목길에 센서등, 안내 표지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 여성안심 귀갓길 내 112 안내판, 반사경 등 범죄예방 시설물 유지·보수

□ 추진실적

- (이상동기범죄) **가시적 순찰강화, 시설 확대** 등으로 방범효과 제고
 - 관악경찰서 산악순찰대 시범운영(8.21.~9.15.) 등 **둘레길, 공원 합동순찰 강화**
 - ▶ 관악구 숲길안전지킴이(50명), 서초구 숲길보안관(10명), 노원구 안전순찰대(22명) 운영
 - 공원·등산로·하천변 및 골목길 내 치안 취약지역에 **CCTV 확대설치를 위한 경찰-자치구 합동 조사** 등
 - ※ 이상동기범죄 관련 위원회 지휘 의결 : ▲제93차회의 「문지마 범죄 대비 범죄예방 활동 강화」(8.4.) ▲제98차회의 「이상동기범죄 관련 범죄예방활동 강화 지휘」(9.22.)
 - **범죄예방인프라(CPTED)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체감안전도 향상
 - ▶ (현황) 골목길 등 후미진 우범 지역 위주 설치
 - ▶ (확대) '24년도부터 둘레길, 산책로 등 인적이 뜸한 여가 장소도 대상에 포함
 - 연내 정보음 발생 및 112신고 가능한 '**여성안심 휴대용비상벨**' 1만개 시범 보급

○ (범죄예방인프라) **지역·환경 특색에 맞는 치안환경 조성**

- '22년도 사업지(강북·관악·구로) 준공, 199개

지점에 시설 설치('23.7.)

▶ 꺾인 골목·필로티주차장 센서등, 모서리거울 등

※ '12년부터 총 77개소 사업 완료



CPTED 사례 - CCTV 시인성 강화 전후

- '23년도 사업대상지 강서·관악·서대문·은평 선정, 자치구별 계획 수립 및 추진

▶ 서울청 및 경찰서·자치구와 함께 실무간담회 개최(2월), 대상지 현장조사 실시(5월)

▶ 범죄예방인프라 자문단이 참여한 착수·중간보고회 개최(5,6월)

▶ 기본·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 업체 선정 중으로 연내 완공 예정

○ (범죄예방 관리구역) **여성안심귀갓길 점검**으로

야간 귀가 안전수단 확보

- 6~7월 여성안심귀갓길 일제점검 및 정비 필요사항 발굴

- 미작동 보안등·로그젝터 등 개선 필요 시설물에 대해

자치구와 순차적 정비 협의



○ (협업창구) **자치구-경찰서 CPTED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맞춤 치안 효율제고(9월)

- 자치구 치안 관련 소통창구 단일화 및 경찰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효과

□ **향후계획**

○ '24년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선정 : 11월 ~ 12월

※ 공모 예정 자치구 사전 수요조사 완료(10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 등 계획

2 서울시-서울경찰청 협업을 통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치안 현장에서 고위험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치료연계의 어려움 개선을 위한 시-서울청 간 협업을 통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 추진개요

- 배경 : 정신질환 관련 응급상황 대응체계 미흡으로 치안현장 어려움 호소
- 내용
 - 응급 환자를 적시에 호송할 수 있는 병상 확보
 - 지역별 촘촘한 응급대응망 구축을 위한 자치구 조례 제정

□ 추진실적

- (정신건강전문요원 확충)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경찰관과 합동 근무 중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속 총원** ('23년 2월 13명 → 10월 19명)
 - ※ 근무 인원 : 현원 31명(경찰 12명, 정신건강전문요원 19명)
- (공공병상 확보) **서울시립병원 및 민간병원 내 전용 공공병상 추가 확보**로 신속한 연계·치료 ('22년 8병상 → '23년 17병상)
 - ※ '23년 확보 공공병상 : 마인드웰병원(3), 고양정신병원(2), 백암정신병원(2), 축령정신병원(2)
- (협업병원 확충) **일반 정신의료기관 협업 병원 확충**으로 응급환자의 적시·안정적 치료 ('22년 29개소 → '23년 32개소)
 - ※ '23년 확충 병원(9월) :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 (자치구별 조례) 자치구별 정신응급질환자 치료·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 제정 추진** ('22년 9개구 → '23년 11개구)
 - ※ '23년 조례 제정: 양천구(3월), 동작구(7월)

⇒ 정신질환 응급입원 처리시간 **약 1시간 단축**(3시간57분→2시간54분)
-23. 8월말 기준-

□ 향후계획

- 의료기관 내 정신응급환자 전용 공공병상 확보 지속 추진 : 계속
-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추가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계속

3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다중운집행사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전 위험성 판단 지표 발굴 등을 통해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

□ 추진개요

- 배경 :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 내용
 - 다중운집행사 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및 내·외부 협력체계 강화
 - 안전관리 전문위원단, 자체 학술용역을 통한 전문적·과학적 관리 기준 적용

□ 추진실적

- (기관협력) 주요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체계적 관리
 - 행사 유관기관 간 합동상황실 운영, 자경위·경찰 SNS 대응방 구축·운영(21건)
 - '23년 주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실적 등 이력화·활용(27건)
- (안전강화) '안전관리 전문위원단' 구성·운영 및 사전 현장 안전점검 확행
 -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외부 안전·인파관리 전문가(총6명)로 구성(3.20)
 - 분기별 위험성 높은 다중운집행사 선정 후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서울청 지휘('22년 7건 → '23년 19건)
 - 위험성 높은 행사 사전 현장점검 확행('22. 2건 → '23.10월 8건)



전문위원단 구성·운영



잼버리행사 현장점검



불꽃축제 현장점검

- (용역수행) 사전 위험성 판단지표 발굴 등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 추진
 - ▲ 국내·외 인파사고 유형화 ▲ 주요 행사 안전관리 우수·미흡 사례 조사 분석 ▲ 세부 위험성 판단지표 발굴로 향후 평가 시 활용

□ 향후계획

- 다중운집행사 위험성 지표 발굴 및 사전 안전성 평가 적용 등 : '24년 ~

4 기관 협업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륜차 등의 교통 위반행위 엄정 단속,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추진

□ 추진개요

- 방향 : 교통사고 및 소음유발 등 무질서 행위 감소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내용
 - 교통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유기적인 교통안전 정책 운영
 - 통학로 보행안전 시설, 단속장비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린이 및 도로교통 안전 제고

□ 추진실적

- (통학로 안전) 유관기관 협업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종로 효제초교 차로(구도) 축소(4차로→3차로) 후 보도 확장하여 통학로 개선(12월 완료)
 - 교육청 합동 안전점검 및 결과분석(10월 말) 후 사업대상 연내 추가 발굴 예정



효제초교 보행로 지장물 현황 및 공사현장 점검

- (시설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한 사고방지 및 시민불편 해소
 - 우리동네 이면도로 교통불편 민원 접수 및 정비(접수 332건, 개선 231건)
 - ※ 개선내용 : 횡단보도 신설, 교통안전표지 정비, 신호운영 개선 등
 - 전문기관·시민의견을 반영한 무단횡단 금지시설 4개소 설치 완료('23.7월)
 - ‘상습정체구간 신호체계 및 시설개선’ 상반기 100개소 완료, 98개소 추진 중
 - ▶ 신호시간 및 체계 개선, 차로 재조정 등 ⇒ 통행속도 8.0% 증가, 정체길이 9.4% 감소

- (이륜차 단속) **이륜차 소음위반 등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교통소음·불법개조 등에 대해 **지자체(시·구)-서울청(署)-교통공단** 합동으로 종합적 단속체계 운영(총 5회, 41건 단속)
 - 교통위반 지속 단속 및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설치**(1→6대)
 - 소음허용기준 강화(105→95dB) 건의 및 기후본부와 지속 협력 추진
- (무인단속 확대) **중대 교통사고 예방**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 무인단속장비 62대를 추가설치하여 법규위반 및 사고 억제력 확대
- (사고 감소) 「**교통사고 감소대책 협의체**」 통한 **협력 강화**로 사고예방 공동 대응
 - 자치경찰위·도시교통실·서울경찰청·교통공단 참여, 사업공유 및 협력 추진
 - 기관별 각종 교통사고 감소시책 추진으로 전년동기(10.18.기준)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22년)172명 → ^(23년)140명, 18%(-32명) 감소(가집계)

※ '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전국) 6.0명 (OECD) 4.7명 (서울) 2.3명

▶ '22년 기준(OECD통계 미발표) : (전국) 5.3명 (서울) 2.3명



교통사고 감소 TF 회의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

□ 향후계획

- '24년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 및 시설 개선 : 11월~
- 이륜차 소음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및 무인단속장비 확대 등 : 12월限

5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질서 준수 문화 적극 조성

안전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통해 질서준수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서울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 추진개요

- 방향 : 기초·공공·교통질서 필요성 홍보로 실천을 통한 성숙한 안전문화 조성
- 내용 : ▲공공장소 우측통행하기 ▲담배꽂초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이륜차·전동킥보드(PM) 안전운행하기

□ 추진실적

※ 「안전질서 문화 조성계획」 수립 (6월)

- (시민홍보)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대상 직접홍보 활동 추진
 - KT&G·기후환경본부와 협업, 휴대용재떨이(2만개) 배포로 거리의 담배꽂초 없애기 운동 전개 (6~7월)
 - 리플릿·포스터를 쏠경찰서, 은행, 구청 민원실 등으로 배포 (9월)
- (캠 페 인) 성숙한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언론매체 등 활용
 - 신문 매체에 기고문, 전면 광고를 게재하여 안전질서 중요성 강조(7월)
 - 대시민 홍보용 동영상 제작 및 市 영상매체(110곳) 표출 (10월 ~)



대시민 홍보용 동영상 주요 장면

- (단속강화) 기초질서·이륜차 관련 무질서 행위 합동단속 실시 ※ 9월기준
 - 경찰서별 불법전단지 배포·쓰레기 투기·무단횡단 등 경범죄 단속 11,646건
 - 지자체(시·구)-서울청(署)-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소음발생 등 총 5회 41건 단속

□ 향후계획

- 서울시·서울경찰청 유관부서와 업무협업 지속 추진 : 계속
 - (기후환경본부) 담배꽂초 없는 거리만들기 (도시교통실) 우측통행표시 확대 등

2.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치안 추진

- ① 인전으로부터 소외된 약자가 없는 예방·지원활동 전개
- ②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③ 한강경찰대 시설·장비 개선으로 시민안전 강화
- ④ 반려견·대학생 순찰대 운영으로 주민친화 방범활동 추진
- ⑤ 치안 유관단체 운영 및 협업체계 활성화

1 안전으로부터 소외된 약자가 없는 예방·지원활동 전개

성범죄, 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등 피해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추진개요

- 대상 :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 내용
 -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 재범방지 추진
 - 시스템 연계,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피해자 맞춤·신속 지원

□ 추진실적

- (사회적약자)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 경찰(APO 등)·자치구·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재)학대우려 가정 및 기관 점검
 - 고위험아동 220명·학대피해 노인 62명 방문점검(6~7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점검(7~10월)
- (가정폭력) 신속·맞춤 보호·지원을 위한 **APO-소나무센터 상담 시스템 연계**(6월)
 - 경찰-자치구 실시간 정보공유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집중관리 및 재발방지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위한 **‘피해자 안전조치 전문가 공동심의제’ 운영**
 - 범죄심리사 등 참여, 안전조치의 객관성 확보 및 피해자 관점 반영
 - ※ 전문가 참여 수당 지원 : 3~8월 144회 개최/ 총 210백만원 지급
- (성범죄) 신학기·하계기간 중 **학교 주변 및 취약요소 점검 등 안전활동 전개**
 - 신학기 기간 ▲성범죄자 거주지 반영한 순찰노선도 제작 ▲학교 내·외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합동점검(1,296개소) 및 시설 개선권고(113개)
 - 하계기간 ▲경찰·지자체·유관기관 간 합동점검팀^(32개팀) 구성하여 다중이용장소 불법촬영 점검^(총1,237개소) ▲대면 예방교육^(170회) 및 캠페인^(39회) 실시

□ 향후계획

- 하반기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 11월

2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학교폭력·청소년 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선제적·집중적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효과성 제고

□ 추진개요

- 배경 : 사이버·마약 등 청소년 범죄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警-學** 협력 필요
- 내용
 -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시기별·대상별 특별 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 교육청 및 학교와 협업 강화,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내실화

□ 추진실적

- (협력강화) **교육청 직원파견, 간담회 정례화** 등으로 안정적인 협력망 구축
 - 市교육청 직원 위원회 파견 근무(7.1), 학폭 등 관련 업무 및 협업 효율 극대화
 - 자경위-市교육청-서울청 합동간담회 3회 개최(6·7·10월) ※ 10.5.부교육감 등 참석
- (특별교육) SPO 중심으로 **신학기 범죄·학교폭력 예방교육** 집중 추진
 -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실제 피해사례 등을 반영한 교육 2,026회(577,526명)
 - SPO 청소년 범죄예방 표준 교육자료 제작·배포로 업무효율 및 교육효과 제고(9.30)
- (경찰학교) **청소년경찰학교 확대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10월 동작경찰서 관할 1개교 추가 설치(9개교 → 10개교)
 - 과학수사 체험·시뮬레이션 사격 등 청소년 흥미유발 프로그램 운영
 - ▶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 388회 7,963명 참여(9.30. 기준)
 - ▶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조례 제정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2회 실시

※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현황**

- 소재 : 노원, 은평, 서초, 동대문, 도봉, 영등포, 강서, 강북, 서대문, 동작
- 23년 예산 : 209,160천원(전액 시비, 22년 국비에산 13,911천원에서 증가)

□ 향후계획

- 수능 후 청소년 범죄예방 유관기관 실무자 합동간담회 개최 : 11월
- 자경위·시교육청·SPO·교사 합동 캠페인 : 12월

3 한강경찰대 시설·장비 개선으로 시민안전 강화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및 계류장 신설 추진으로, 한강상 인명구조와 범죄예방 등 시민안전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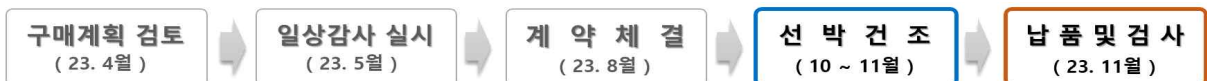
□ 추진개요

- 기간 : 4월~11월
- 개선사항 및 예산
 - (순찰정) 연식이 경과한 소형순찰정 2정을 중형으로 교체 / 12.6억(1정당 6.3억)
 - (계류장) 원활한 순찰정 정박 및 업무수행을 위한 공간확대 / 1.4억(국비 1억, 시비 0.4억)

□ 추진실적

1. 노후 순찰정 교체

- (교체내용) 소형순찰정 2대(105호, 107호) → **중형 2대로 신규 교체**
 - ※ 한강경찰대 순찰정 운영현황 : 총 7정(중형 4정, 소형 3정 / 평균연식 11.5년)
- (진행경과) 선박 건조 중, 11월까지 납품완료 추진



2. 이촌 계류장 신설

- (신설내용) 이촌센터에 **자체 계류장 신설**(규모 140㎡, 장비창고 48㎡)
 - ※ 한강경찰대 계류장 운영현황 : 총 4개소(뚝섬센터 자체보유, 망원·이촌·광나루센터 임차중)
- (진행경과) 공사 진행 중, 11월까지 준공완료 추진



□ 향후계획

- 한강경찰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연내 사업추진 완료: ~11월

참 고

한강경찰대 센터별 시설현황

구분	센터 현황			계류장 현황			순찰정	비 고
	소재지	준 공	관할구역	위 치	재산구분	면적		
망원 센터 (본대)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민공원내)	05년 (98㎡)	마포대교 (상류) ~ 행주대교	성산대교 북단 (동측방향)	한강 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하천점유 허가 중)	150㎡	총 2정 중형1정 (11년차) 소형1정 (16년차)	'23년도 소형순찰정 1정 중형으로 교체예정
이촌 센터	 용산구 이촌동 (이촌공원내)	92년 (36㎡)	한남대교 (상류) ~ 마포대교 (하류)	한강대교 북단 (동측방향)	한강 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하천점유 허가 중)	150㎡	총 1정 중형1정 (9년차)	-
뚝섬 센터	 광진구 자양동 (뚝섬시민공원내)	09년 (112㎡)	잠실대교 (상류) ~ 한남대교 (하류)	영동대교 북단 (동측방향)	한강 경찰대 (자체보유)	290㎡	총 2정 중형1정 (9년차) 소형1정 (11년차)	-
광나루 센터	 강동구 천호2동 (광나루시민공원내)	92년 (36㎡)	강동대교 (상류) ~ 잠실대교 (하류)	광진교 남단 (동측방향)	한강 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하천점유 허가 중)	150㎡	총 2정 중형1정 (11년차) 소형1정 (14년차)	'23년도 소형순찰정 1정 중형으로 교체예정

4 반려견·대학생 순찰대 운영으로 주민친화 방법활동 추진

시민참여 순찰대의 지역사회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는 촘촘한 지역맞춤형 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대상

- (반려견) 숲 자치구 반려견 순찰대(반려견과 견주) 1,011팀 (10월 292팀 추가선발)
※ 선발심사 항목 : ▲보호자 따라 걷기 ▲보호자 명령어 이행 ▲외부자극에 차분하게 반응하기
- (대학생) 공모에 신청한 9개교 315명

○ 내용 : 순찰대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안활동 지원(5~12월)

□ 추진실적

○ (출범) '23년 각 순찰대 선발 및 발대식 개최하여 동기와 소속감 부여

- 4.30.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순찰대원인 반려견 약 6백마리, 견주 등 약 1천명 참석
▶ 동물병원((사)동물사랑봉사)과 반려견 의료기부 업무협약으로 순찰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
- 5.2. 서울 시민청에서 대학생 순찰대원 대상 방법 안전교육을 겸한 발대식
※ 상해보험 가입 및 순찰 안전장비 지원, 경-학 학점 이수제로 학점 취득 인정

○ (효과) 자발적인 지역순찰 진행, 실질적인 지역 치안개선 보조역할 수행

- 반려견 : 112 신고 257건, 120 신고 1,554건, 순찰일지 28,983건 작성(5~9월)

- ▶ 돌레길, 하천, 배수로 막힘 등 장마철 침수 피해 예방 집중순찰로 112신고 42건, 120신고 201건 조치
- ▶ 여름 한강공원(여의도·반포·망원·뚝섬) 대상 '그레이트 한강' 합동순찰 시행(8.4.~9.1.)
- ▶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활동(9.1.~9.7.) 시행, 총 1,108개 시설물 점검 후 218건 신고 조치

- 대학생 : 9개 대학교 캠퍼스 내·외 총 248건 순찰 수행(5~9월)

- ▶ 이상동기범죄 특별방법활동으로 관할 경찰서 연계 합동순찰 시행
· 백석대-방배서 한강시민공원 합동순찰(8.4.)
· 동국대-중부서-자율방법대 합동순찰(8.8.)

□ 향후계획

○ 반려견 순찰대 도심권 대규모 공원 합동순찰 추진 : 11월

작성 자 |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박재형 ☎9816 담당: 강민준 ☎9818

5 치안 유관단체 운영 및 협업체계 활성화

치안 유관 시민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간 소통 강화 및 협력치안 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치안 강화 도모

□ 추진개요

- 대상 : 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시민정책자문단

단체별 역할

- (자율방범대) 지역방범 순찰활동 봉사, 범죄예방 캠페인 등
- (모범운전자회) 교통혼잡 시간대, 주요행사 교통보조 및 캠페인
-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 (시민정책자문단) 333인의 우리동네 치안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자치경찰 홍보 등

○ 내용

- 치안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치안활동 활성화
-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맞춤형 치안 시책 반영

□ 추진실적

- 자율방범대 지원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의 치안 동반자 기반 마련

- 23.4.27.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활동 및 경비 지원 근거 신설
- 순찰효과 제고를 위한 안전장비 등 24년 시예산 증액(15억75백만원)
- 자율방범대를 통한 주민치안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대상 예산편성 요청 노력

- ▶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한 25개 자치구 과장 전체회의 개최(9.1)
- ▶ 구청장(부구청장) 대상 예산편성 협조요청 : 서대문·송파·종로·중·양천구
- ▶ 25개 구청장 대상 자치경찰위원장 서한문 발송(9.14)
- ▶ 구청장회의(10.10) 및 부구청장회의(9.20) 시 협조요청
- ▶ 「지역치안협의회」 시 ‘자율방범대 지원 강화’ 안건 상정 경찰서 협조요청(9월~)

작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 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박재형 ☎ 9816 담당: 오병헌 ☎ 9814
김영수 ☎ 9817

- **단체별 간담회** 개최로 정책제안, 안전활동 등 **시의성 있는 유기적 협업추진**
 - 교통분야 치안협력단체 표창수여(3월 모범운전자회 10명, 녹색어머니회 7명)
 - 이상동기범죄 빈발 관련, 자율방범활동 강화 긴급 현안회의(8월)
 - 시민정책자문단 권역·분과별 간담회(3~7월)

- **치안 유관단체의 순찰·교통안전 지원 활동 적극 참여**로 지역안전 유지
 - 자율방범대 :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순찰횟수 증가, 방범대-연합대간 합동순찰 집중 실시(8월~)
 - 모범운전자회 : 주요 행사 주변도로 교통관리로 혼잡 최소화 및 안전유지(연중)
 - 녹색어머니회 : 등하굣길 교통지도 외 경찰자치구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연중)

- **시민정책자문단,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자치경찰 정책 참여**
 - 치안개선사항 : 스쿨존 지역 주행속도 일률적 하향조정 등 12건
 - 정책개발 관련 제안 : 이륜차 단속방안, 신호등 없는 교차로 식별표시 설치 등 17건
 - 우수 자치경찰관 ‘My Soul 자치경찰’ 선발 온라인 투표(112명 참여)



덕의초交通安全캠페인



교통협력단체 표창수여 및 간담회



자율방범연합회 간담회

향후계획

- 단체별 연말 간담회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
- 現시민정책자문단 임기만료('23.11월)에 따른 2기 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3. 자치경찰 제도개선 추진 및 운영 내실화

- 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②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형 치안 지휘체계 확립
- ③ 자치경찰 교육·후생복지 지원으로 소속감 및 사기 제고
- ④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및 소통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 ⑤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인사·감사 적극 시행

1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자치경찰이 충분한 권한 하에 지역의 치안을 관장하여 보다 강화된 지역 치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권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추진개요

-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정부·국회 건의
- 시민과 자치경찰이 중심이 되는 서울 차원의 이원화 방안 마련

정부동향

- '22.9월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이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도개선안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음
 - ※ 당초 '23.3. 발표예정 → '23.5.로 연기 → 무기한 연기
 - 주요 발표 지연사유는 ‘경찰대 개편방향 미확정’이며, 내년 총선으로 인해 정부·국회가 경찰 여론을 고려하고 있어 추가 지연 전망

□ 추진실적

- 정부·국회에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요구 : 총 42회('21.7월~)
 - 국회 상임위원 등 면담('23.4), 전국 위원장협의회 건의문 발표('23.8) 등
-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서울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건의('23.2월)
 - 지구대·파출소를 비롯한 경찰인력·조직 이관 등 서울시 모델안 자체 마련·건의
- 2주년 토크콘서트 개최('23.6월), 시민에게 제도개선 필요성 인식 함양
 - 시민·경찰관·전문가 등 패널간 제도개선 필요성 인식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 제도개선 홍보물 지하철 게시·배포 등 홍보('23.3~5월)
 - 제도개선 필요성 및 자치경찰 역할 등 지하철에 영상 및 홍보물 부착, 미디어보드 게시 등 홍보



□ 향후계획

- 전국 위원장협의회·시도협과 함께 ‘이원화 자치경찰제’ 신속한 추진 지속 건의

2 |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형 치안 지휘체계 확립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심의·의결 기능 강화로 시민맞춤형 치안정책 적기 지휘, '신뢰받는 서울 자치경찰' 구현

□ 추진개요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구성 : 7명
- 회의운영 : 매월 2회 정기회의 및 치안상황을 고려한 임시회의 수시 개최
- 회의결과 : 서울경찰청에 통보하여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지휘·감독

□ 추진실적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적기 개최로 **이슈별·시기별 맞춤형 심의·의결**
 - (이상동기범죄 대응) 가시적 위력 순찰 강화, 범죄 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CCTV 관제센터 연계 강화 등 범죄예방활동 강화 지휘
 - (풍수해 등 대비) 풍수해 피해예방 및 긴급구조 지원,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 등
- 총 22차례 회의 개최를 통해 **214건 안건 처리** (의결156, 보고58)
 - (인사) 지역관서장 보직의견 제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대상자 의결 등 106건
 - (교통·경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교통시설 개선 등 19건
 - (여성·청소년) 불법촬영 점검, 노인·장애인시설 폭력 합동점검 등 18건
 - (생활안전) 범죄예방인프라 강화, 범죄예방 활동 등 14건

< '23년도 분야별 안건 현황('23.1.~9.) >

(단위:건)

총계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교통·경비	인사	감사	제도개선	기타
214	18	14	19	106	13	5	39

□ 향후계획

- 주요 지휘·감독 사례를 지속 관리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 확보 : 계속
-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방식 활용을 위한 회의운영 세칙 개정 : 11월

3 자치경찰 교육·후생복지 지원으로 소속감 및 사기제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치안 접점에 있는 일선 자치경찰의 후생복지 지원 및 맞춤형 교육 추진

□ 추진개요

- 대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 내용 : 후생복지 지원, 시설개선, 경찰 및 시민 대상 교육 시행 등

□ 추진실적

-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후생복지 증진
 - 서울경찰청(署) 자치경찰 담당 총 3,982명 대상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당 50만원 지원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市 정신건강복지센터 협조) 지원으로 정신건강 상담·진료 예정
 - ▶ (일 시) '23년 11. 28./12.14. (대 상) 한강경찰대 대원 20여명
- (환경개선) 자치경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 지하철·한강·관광경찰대 및 유실물센터·교통센터 등 현장조사 실시(3.7.~3.28.)
 - 한강경찰대 이촌센터 계류장 신설 추진(11월 완료)
- (현장교육) 경찰 및 시민 대상, **맞춤형 자치경찰·인권 현장 교육 확대**
 - 경찰 대상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 운영 : 강남·성북 등 14개 경찰서 627명 교육
 - 시민 대상 「자치경찰인권 시민대학」 운영(6.22.~7.19.)으로 치안현장 체험기회 제공
-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 활용 교육 확대 및 신규 콘텐츠 개발**
 - 서울경찰청 온라인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 제고(3,720회 조회)
 - 자치경찰인권 관련 치안 우수사례 중심 신규 온라인 콘텐츠 4편 제작

□ 향후계획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경찰교육포털, 市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 11월 ~
- '24년도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계획 수립 : '24. 1월

작성 자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2133-9854 교육후생팀장: 김훈기☎9855 담당: 유효준☎9857
장재원☎9858

4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및 소통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서울 자치경찰의 주요시책을 온·오프라인 및 언론매체 등에 적극 홍보하고 시민참여 강화를 통해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소통활성화 추진

□ 추진방향

- 시민 참여형 정책 홍보를 통해 대시민 소통 활성화 추진
- 온·오프라인 및 언론매체 활용 제도개선 홍보 및 여론청취 추진

□ 추진실적

-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기념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5~7월)
 - 자치경찰 활약상 및 기초질서 확립을 주제로 총 109점 접수, 20개 선정
 - 청계천에서 수상작 및 협력단체 사진 전시회 개최(6.29.~7.13.)
- 시민과 적극적 소통을 위한 인스타그램(SNS) 개설 및 운영(3~9월)
 - 서울 자치경찰 ‘인스타그램’ 개설,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 실시(구독자 1,710명)
- 시민이 소통파트너로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추진(1월~7월)
 - 서울 블로그메이트 및 시민기자단 활용, 사진전·반려견순찰대 발대식 등 홍보(15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시책 홍보 강화(1~9월)
 - 신문매체 활용, 한강경찰대·반려견 순찰대 모집·기초질서 캠페인 등 광고 실시
 - 효과적인 시책홍보와 시민 관심유지를 위한 언론 및 온라인매체 홍보(1,186건)
- 위원회 누리집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 강화 물품 제작
 - 포털사이트 ‘자치경찰’ 검색 시 누리집 내 정보 우선 제공 등 연계 강화
 - 제도개선, 기초질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 향후계획

- 2023년 대시민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 11월 限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자치경찰위원회 시책 홍보 : 연중

작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 2133-9804 자치경찰홍보팀장: 니정피 ☎ 9826 담당: 박기연 ☎ 9827
최소영 ☎ 9828

5 자치경찰 인사·감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치경찰의 체계적 임용권 행사방안 마련, 분야별 면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뒷받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인사실무 확립을 위한 자료관리 체계화, 동기부여를 위한 유공직원 포상 확대
- 지적 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불합리한 제도·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을 지향

□ 추진실적

① 자치경찰 인사제도 운영 시스템 강화

- **인사관리시스템 접속권한 확보로** 자치경찰 인사자료 관리 체계화
 - ‘경찰 인사관리시스템’ 접속 권한 협의완료(9월), 임용 추천안 검증 실시 中
- **권역별 경찰서 방문을 통해 일선에서 느끼는 인사 업무 개선사항 수렴**
 - 은평·서부경찰서 방문(9.14), 금천·영등포경찰서 방문(10.25)
 - 표창, 전보, 휴직 등 관련 일선 인사담당자의 요구·고충 사항 취합하여 인사 실무 매뉴얼 내용에 반영(~12월)



- **‘MY SOUL 자치경찰’ 선발 등 우수사례 및 시책 적극 발굴하여 포상**
 - 총 3,660매 포상 및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동기부여 및 성과창출 지원 ('23.10.10.기준, 총 3,660매 중 78% 수여)
 - 자치경찰 2주년 기념 ‘MY SOUL 자치경찰’ 5명 선발
 - ▶ 내부심사 및 자경위 시민정책자문단, 서울경찰청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동행’, ‘행복’, ‘안전’, ‘희망’, ‘창의’ 분야 각 1명 선발*
- * 관악서 실종, 광진서 여성청소년과, 노원서 교통과, 종로서 여성청소년과, 강서서 생활안전과



작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2133-9804 자치경찰인사팀장: 김지후 ☎9821 담당: 신수연 ☎9824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2133-9854 인권감사팀장: 김경진 ☎9871 담당: 이종행 ☎9873

②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감사 업무 적극 수행

○ (감사 현황) 종합감사 3개 경찰관서 및 일상감사 6건 수행

※ '23년 대상기관(11) : 강북·종암·서대문·광진·강서·은평·도봉·강남·동대문·남대문·용산

연번	분야별	대상 관서 및 내용	
1	종합감사	완료(3)	① 강북(5. 8. ~ 12.) ② 종암(5. 15. ~ 19.) ③ 서대문(7. 17. ~ 21.)
		예정(8)	④ 광진 ⑤ 강서 ⑥ 은평 ⑦ 도봉 ⑧ 강남 ⑨ 동대문 ⑩ 남대문 ⑪ 용산
2	일상감사	완료(6)	① 한강경찰대 신형 순찰정 구매 사업(4월)
			②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사업(5월)
			③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사업(6월) / 당초 계획 변경, 재의뢰
			④ 한강경찰대 수상 오토바이 구매 사업(7월)
			⑤ 관광경찰대 명동·이태원센터 시설개선 사업(8월)
			⑥ '23년 무인교통단속장비 2차 구매사업(9월)

○ (감사 결과) 유실물처리·수기관행 등 15건의 업무 개선사항 발굴, 시정·개선조치

< 주요 시정·개선 조치사항 >

- ▶ (시민중심 감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 교부 관련 업무처리 강화,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관리 강화, 유실물(습득현금) 처리 절차 강화 등
- ▶ (현장고충 해결) 112신고 미단속 풍속업소 중복 보고(풍속업무관리시스템 + 수기) 관행 개선

□ 향후계획

○ 인사실무 매뉴얼 제작 후 서울청 및 경찰서 담당자 교육 : 12월 限

○ 서울광진·강서 등 8개 경찰관서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수행 : 하반기

※ 특정감사 등은 경찰청·서울경찰청과 소통·협력하여 적시성 있게 추진 예정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8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28	20	8	0	0
	시정· 처리요구사항	14	10	4	0	0
	건의 사항	10	6	4	0	0
	기타(자료제출 등)	4	4	0	0	0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자치경찰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시 안전총괄과로부터 사건 발생 1시간 후에 관련 보고를 받았음. 따라서 서울시, 각 구청, 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자치경찰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 등의 재난 관리 조직·시스템 개선에 맞추어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 소집 및 지휘·의결 필요성 판단을 위한 상황파악·자료수집 목적의 보고체계를 서울경찰청과 협의 -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위기관리작전계) 등 담당부서에서 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협력과로 보고·전파중 ※ 서울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라 위기관리작전계가 '재난관리업무' 및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업무' 일괄 담당중('23.4월)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질서협력반) 편입
<p>○ 행사주최가 없다는 것이 면피의 이유가 될 수 없음. 주최자 여부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시민이 운집하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당연 경찰에 있기 때문임. 이를 반성하고 시정할 것 (자치경찰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3.27.)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자치경찰사무로 명확히 규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비고3: 위 표의 다목 중 '다중운집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안전관리 전문위원단을 발족(3.20.) -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개선 자문 수행(분기별 1회) ○ 2·3분기 총 10개 주요다중운집행사 및 주요행사 안전관리 강화 지휘·의결(제80차, 제82차, 제87차, 제88차, 제94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행사에 사전 현장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 봄꽃 축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사항 현장점검(3.31.(금), 4.3.(월)), 서울 페스타 현장점검(4.28.(금)) ○ 서울청은 사무분장규칙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를 ‘위기관리작전계로 명확히 지정하여 적극 대응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회의를 통한 주요 다중운집행사 선정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지휘(분기별) ○ 위험성 판단 위한 과학적 지표 마련 위해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자체(서울시, 용산구청) 차원의 재난컨트롤타워가 모두 부재했고, 이태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전관리가 아니었다는 점이 참사의 원인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자치경찰총괄과)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등 안전관리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주관부서의 중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요청시 의결을 통해 안전관리 지원 지휘(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 각종 행사 재난시 서울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및 자체 상황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 거리응원(’22.12월), 제야의 종 타중행사(’22. 12. 31.) 등 안전대응상황반 기 운영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치경찰총괄과’가 ‘질서협력반’ 실무반장 역할 수행(관련 서울시 규칙, 지침 등 개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23.7~8월) 상황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일원으로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이후 여러 책임자들이 면피성 발언을 했는데, 자치경찰위원장도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한정해 관리한다는 면피성 발언을 했음. 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 (자치경찰협력과)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3.27.)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자치경찰사무로 명확히 규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비고3: 위 표의 다목 중 ‘다중운집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한다.</p> </div>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안전관리 전문위원단을 발족(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개선 자문 수행(분기별 1회) ○ 2·3분기 총 10개 주요다중운집행사 및 주요행사 안전관리 강화 지휘·의결(제80차, 제82차, 제87차, 제88차, 제94차) ○ 주요행사에 사전 현장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 봄꽃 축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사항 현장점검(3.31.(금), 4.3.(월)), 서울 페스타 현장점검(4.28.(금)) ○ 서울청은 사무분장규칙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를 ‘위기관리작전계로 명확히 지정하여 대응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회의를 통한 주요 다중운집행사 선정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지휘(분기별) ○ 위험성 판단 위한 과학적 지표 마련 위해 전문용역 추진(예정)
<p>○ 자치경찰 대상 저조한 교육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해주기 바람 (자치경찰지원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 자치경찰 대상 온라인 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서울청 소속 경찰서별 직장교육 시, 온라인 교육콘텐츠 활용 협조(‘22.11월) 및 교육 진행 중(~’23. 10월) - 서울청 온라인 게시판에 핵심 교육콘텐츠* 요약본 게시(‘23.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제도로 서울시를 더 안전하게!(10분), 자치경찰과 인권(17분) * 서울청 온라인 게시판 핵심 교육콘텐츠 요약본 3,720회 조회, 수강 ○ 자치경찰 대상, 맞춤형 자치경찰·인권 현장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학교』 현장교육 : 총 14회*, 627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랑, 남대문, 강동, 중부, 혜화, 동작, 강남, 성북, 구로, 서울청, 강서, 강북, 종로, 영등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제작 온라인 교육콘텐츠 활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청 온라인 게시판에 핵심 교육콘텐츠 요약본 지속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신규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23. 4~10월), 운영 예정 ○ ’23년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 지속 운영 : ~’23.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계를 만들어주기 바람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등 안전관리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주관부서의 중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요청시 의결을 통해 안전관리 지원 지휘(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 각종 행사 재난시 서울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및 자체 상황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 거리응원('22.12월), 제야의 종 타종행사('22. 12. 31.) 등 안전대응상황반 기 운영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치경찰총괄과'가 '질서.협력반' 실무반장 역할 수행(관련 서울시 규칙, 지침 등 개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23.7~8월) 상황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일원으로서 대응
<p>○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낮은 점수가 나왔음. 수직적 조직문화, 부정확한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부당성 등을 개선해 자치경찰위원회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해주길 바람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청렴도 향상계획 수립('22.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내부 직원 대상 정보매체인 서.자.경.지에 청렴에 대한 특보 편성, 청렴교육 전원 조기 이수 ○ 자체 청렴점검TF 운영('22.8월 ~) ○ 자치경찰 주니어보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연차·젊은 직원 총원 대상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회의안건 수합 후 대표회의(6인) 진행, 회의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위원장 의견 회신 ○ 2023년도 내부청렴도 결과 : 2등급 (* 2022년도:5등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점검 TF 연중 상시 운영 ○ 분기별 자치경찰 주니어보드 회의 개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자율방법대원의 복장 및 지구대, 파출소, 교통정보센터 등 시설의 심각한 노후도 등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길 바람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지원과)</p>	<p>□ 추진상황 : 추진중</p> <p>□ 추진내용</p> <p>[자율방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방법대원 복제 등 지원 관련 자율방법연합회 간담회 추진 : 5회 ('21.7.21., '21.8.9., '22.10.4., '23.3.22., '23.7.19.) ○ '23년 자율방법연합회 지원예산(민간경상보조) 중 방법대 순찰복 지원비 일부 반영: 20,460천원 ○ '24년 자율방법대 복장·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요구 : 1,230,650천원('24년 편성(안)) ○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예산확보 협조 요청('23.10.11.) ○ 서울시 자율방법연합회 정례회의 참석 예산확보 협조 요청('23.10.10.) <p>[자치경찰 근무환경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서울청 실무협의회 안전 상정('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대·파출소 리모델링 지원' 관련 기관 간 의견 교환 ○ 지하철·한강·관광경찰대 및 유실물센터·교통센터 등 현장조사 실시(3.7.~3.28.) ○ 자치경찰의 노후·협소한 시설 개선 및 기본물품 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경찰대 등 근무공간 리모델링(주방·화장실·건물 외부 등), 공용차량 주차료, 공기청정기·사무용 집기 등 수시 지원 ○ 한강경찰대 이촌센터 계류장 신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11월 완료 예정 ○ 법제처 등 근무환경 개선의 직접적 지원 근거 법령해석 요청(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안전(안전번호 23-0595)으로 접수처리(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 행정기관간 법령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로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해 정부 전체차원에서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자율방범대] ○ 자치구별 예산편성에 따른 자율방범대 복장·장비 지원 계획 수립('24. 1월) [자치경찰 근무환경개선] ○ 자치경찰 시설개선을 위한 법령해석 관련 법제처 협의(계속) ○ 기재부-서울시 국·공유 재산 맞교환 상황 모니터링(계속) ○ 자치경찰의 노후·협소한 시설 개선 및 기본 물품 부족 지원(계속)
<p>○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자치경찰위원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언론인터뷰를 한 바가 있음. 주최자, 다중운집행사 정의 등 운운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태도이며, 이에 대해 사과할 것 (자치경찰협력과)</p>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3.27.)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자치경찰사무로 명확히 규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비고3: 위 표의 다목 중 '다중운집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한다.</p> </div> ○ '중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안전관리 전문위원단 발족(3.20.) -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개선 자문 수행(분기별 1회) ○ 2·3분기 총 10개 주요다중운집행사 및 주요행사 안전관리 강화 지휘·의결(제80차, 제82차, 제87차, 제88차, 제94차) ○ 주요행사에 사전 현장점검 실시 - 여의도 봄꽃 축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사항 현장점검(3.31.(금), 4.3.(월)), 서울 페스타 현장점검(4.28.(금)) ○ 서울청은 사무분장규칙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를 '위기관리작전계로 명확히 지정하여 적극 대응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회의를 통한 주요 다중운집행사 선정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지휘(분기별) ○ 위험성 판단 위한 과학적 지표 마련 위해 직접 학술용역 추진
<p>○ 주최 존재 유무와 관계없음에도 자치경찰 위원회는 ‘다중운집행사’를 주최가 있는 경우로만 과소 해석하여 업무를 추진했음. 다중운집행사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라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며 해명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함. 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시정할 것 (자치경찰협력과)</p>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3.27.)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자치경찰사무로 명확히 규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비고3: 위 표의 다목 중 ‘다중운집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안전관리 전문위원단을 발족(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개선 자문 수행(분기별 1회) ○ 2·3분기 총 10개 주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강화 지휘·의결 (제80차, 제82차, 제87차, 제88차, 제94차) ○ 주요행사에 사전 현장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 봄꽃 축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사항 현장점검(3.31.(금), 4.3.(월)), 서울 페스타 현장점검(4.28.(금)) ○ 서울청은 사무분장규칙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를 ‘위기관리작전계로 명확히 지정하여 적극 대응 중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회의를 통한 주요 다중운집행사 선정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지휘(분기별) ○ 위험성 판단 위한 과학적 지표 마련 위해 직접 학술용역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안심마을보안관, 안심귀가서비스 등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각 사업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중복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현장에서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통합, 조정안을 마련하고 마을의 치안, 방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마을보안관 및 자율방범 협업 관련 회의('22.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자치경찰정책팀장, 1인가구담당관 안전지원팀장, 각 사업 담당 주무관 - 주요내용 : 안심마을보안관과 자율방범대 업무 협업 ○ 안심마을보안관-자율방범대 유사중복성 보완을 위한 사전협의('2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도 운영방안 수립시 상호간 사전협의, 안심마을보안관 선발 시 자율방범대원 신청 홍보, 초소 공동사용, 합동순찰 등 ○ '23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계획(1인가구담당관-632호(23.1.13.)) 제71차 위원회 보고안건 상정('23. 2. 7.) ○ 안심마을보안관과 자율방범대 협업추진('23.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마을보안관 선발(63명) 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한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및 선발(16명, 27%) - 지역 치안활동 순찰 노하우 및 방범초소(4개소) 공유 등
<p>○ 이태원 참사의 공식적인 참사 발발 시간은 10월 29일, 22시 15분임. 자치경찰위원회는 23시 30분 서울시로부터 내용을 통보받고 참사를 처음 인지함. 서울시와 경찰청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하고 거꾸로 서울시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청 내 위상이 보잘 것 없으며 역할은 형식</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정립 및 진정한 자치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현황)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하여 '23.10월까지 총 42회 국회 및 정부대상 건의 추진 - (건의내용)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직제 환원,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마련, 시·도 임용권 내실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신속 도입 촉구 등 ○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 마련 및 건의 ('23.2월, 행정안전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할 것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 타 시도와 협력하여 정부 및 국회 대상 지속 건의
<p>○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시점은 참사 발생 다음 날 오후 3시임. 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를 경시하고 있는 결과임.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체계의 정비 및 개선 필요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재해·재난사고에 관한 동향보고 등 행자위 전문위원실에 서면보고 등 추진 -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위기관리작전계) 등 담당부서에서 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협력과로 보고·전과중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질서협력반) 편입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유관기관 등에 각종 상황발생시 적시 보고(상시)
<p>○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1. 지구대, 파출소 등의 현장 업무가 자치경찰소관으로 이전 2.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자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 3. 인사권의 독립과 실질적 임용권의 수행 등이 절실함.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국회 행안위에 건의 1건 보낸 것이 전부임. 위원장은 2022년 출장 26회 중 반려건 순찰대 관련 업</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정립 및 진정한 자치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 추진 - (건의현황)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하여 '23.10월까지 총 42회 국회 및 정부대상 건의 추진 - (건의내용)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직제 환원,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마련, 시도 임용권 내실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신속 도입 촉구 등 ○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 마련 및 건의 ('23.2월, 행정안전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무가 5건임. 반려견 순찰대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 위원회의 상황에서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할 때임. 현장 업무의 이전, 안정적 재원의 확보와 인사권의 독립 등 산적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전략의 수립을 요함 (자치경찰총괄과)</p>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 타 시도와 협력하여 정부 및 국회 대상 지속 건의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경찰법 및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교통업무가 자치경찰의 업무로 되어 있음. 하지만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아직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음. 교통안전심의회를 자치경찰위원회로 옮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교통안전심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길 바람 (자치경찰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권한이관 관련 협의('21.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운영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이관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7조 - 기존 서울청 위주의 교통안전심의회 위원 인력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위원(자치경찰협력과장) 참여 확대('22.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심의회 위원 총 29명 중 서울시 관련부서 과장급 3명(자치경찰협력과, 교통운영과·보행자전거과) 포함, 활동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적극 참석(분기 1회 이상) ○ 정기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효과성·적절성 개선 도모
<p>○ 사건 발생 시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도록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바람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정립 및 진정한 자치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현황)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하여 '23.10월까지 총 42회 국회 및 정부대상 건의 추진 - (건의내용)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직제 환원,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마련, 시·도 임용권 내실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신속 도입 촉구 등 ○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 마련 및 건의 ('23.2월, 행정안전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 타 시도와 협력하여 정부 및 국회 대상 지속 건의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학교폭력 예방에 투입되는 인원(SPO)은 133명인데 이들이 담당하는 학교는 1400여 개. 1명당 담당 학교가 10개 이상으로, 너무 많아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 실효성에도 의문이 감. 개선책이 필요함 (자치경찰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O 실질적 업무량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동료강사 활용한 신학기 범죄예방교육 전문강사 지원 - 가출패م 등을 발견·해제활동시 소요되는 SPO 활동비 지원 - 각 학교 자체 학폭위 설치시 SPO 연락 의무방안 교육청과 협의 - 신학기 SPO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자료 제작·배포(9.30) ○ 자치경찰위원회 內 교육청 직원 파견 배치(7.1)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관련 자경위-교육청-서울청 합동 간담회 추진 ○ 24년 예산 편성시 SPO 지원예산안 반영 지속 추진
<p>○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에 CCTV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함. SPO가 항시 CCTV를 주시하고, 사전에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행정을 할 것 (자치경찰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내 CCTV 모니터링 강화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협력과-7208호(23.8.17) ※ SPO의 학교내 CCTV 열람은 제도적·법적 근거 미흡
<p>○ 서울 자율방범대원 활동 과 안심마을보안관의 활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그런데 안심마을보안관(18억) 대비 서울자율방범대(1억)에 대한 예산 지원에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민간경상보조) 예산: 2억5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예산 1억원 대비 150% 증액 편성 ○ (증액사유) 자율방범 활동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그간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였으나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비를 신규 편성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해 보임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예산 신규편성: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직접 지역치안활동을 수행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 대학생 순찰대 확대 운영('23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5개 대학 169명 → 9개 대학 315명으로 확대운영 추진 ○ '안전한 서울 만들기 우리도 동행!' 치안 유관단체 맞춤형 협력 추진('23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방범연합회 : 방법순찰 활성화 및 질서관리 협력 - 모범운전자연합회 : 러시아워 및 주요행사 교통관리 지원 - 녹색어머니연합회 : 스쿨존 등 교통안전지도 특별 강화 협력 ○ 치안 협력단체(자방, 모범, 녹색) 간담회 추진(분기별) ○ 23년도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 개최('23.4.30.) ○ 제2기 대학생순찰대 발대식 및 방법안전교육('23.5. 2.)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순찰대, 대학생순찰대, 자율방범대 지원 등 주민참여 치안정책 지속·보완
<p>○ '지자체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장 소속으로 만들어진 것임. 금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매뉴얼, 조례 규정 탓하지 않고 정확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7. 국회 현안질의시 시장이 참사 결과에 대해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서울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 ○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고(1.27), 현재 다중운집행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경찰 조례에 명시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위의 대책 등을 반영, 경찰과 협의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이태원 참사 유실물 처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 것은 다행이나, 애초에 기간을 1주일로 짧게 지정했는지 의문이며 이는 행정편의적으로 조치한 것. 현장에서는 유실물을 찾아가는데 혼선이 있다고 하므로 챙겨주기 바람 (자치경찰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원 참사 관련 유실물 관리에 관한 지휘 ('22.11.9.) ○ 이태원 참사 유실물 처리 기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이 협의하여 용산 원호 다목적 체육관을 유실물 임시 보관소로 지정, 집중 관리함. - (연장 운영) 유족·피해자 등의 편의를 위해 체육관 시설의 운영기간 연장 요청하여 2주간 연장운영 - (이관조치 및 보존기간 최대 확보) 유실물 등의 안정적 보관·관리를 위해 용산경찰서 서고(항온·항습 기능 설비)로 이관, 반환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초기에 24시간 운영하여 현장 반환을 최대한 진행하였음. - 보존기간은 유실물법상 습득 6개월 후 처리 대상이나, 이태원 참사 관련 유품·유실물은 형사소송법 제218조 등을 적용하여 수사종결시까지 최대한으로 보관할 예정임. ○ 유실물 반환에 대한 혼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와 관련된 유류 물건은 수사과에서, 일반 유실물 등은 생활안전과에서 보관·관리함으로써 유가족 등이 유실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 - 현재는 용산경찰서 임시 유실물 보관소에서 일괄 보관 중이므로 반환 시 혼선은 해소되었음 - 수집된 유실물 중 31.6% 반환, 남은 유실물은 Lost112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종결 시까지 유실물 보관, 반환 업무 계속 진행 예정
<p>○ 디지털성범죄 업무는 시 소관이라는 자치경찰 위원회의 답변을 볼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조례상</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신학기 성범죄 예방 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홍보 전개 ○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활동 집중 전개

건의사항	조치결과
<p>성범죄 예방은 자치경찰 사무이므로,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람 (자치경찰협력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화장실, 야외수영장 등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등 실시 - 시민·지자체 등과 불법촬영 합동 점검, 민간 요청시 장비 적극 대여 ○ SPO(학교전담경찰관) 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홍보활동 전개 ○ 사이버 범죄 전담 SPO(37명) 지정·운영 -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뿐 아니라 사안발견시 수사연계 등 대응총력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시 경찰 수사와 병행하여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 피해 영상 삭제·차단 적극 지원
<p>○ 자치경찰위원장이 해야할 일은 자치경찰사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임. 행사장 다니는 것은 줄이고,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정립 및 진정한 자치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현황)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하여 '23.10월까지 총 42회 국회 및 정부대상 건의 추진 - (건의내용)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직제 환원,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채용 마련, 시·도 임용권 내실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신속 도입 촉구 등 ○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 마련 및 건의 ('23.2월, 행정안전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 타 시도와 협력하여 정부 및 국회 대상 지속 건의